

EU가 요구한 일본의 비관세장벽

- EU는 일본과의 EPA 협상(2014.12.8.~12)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
- 日·EU 간 비관세 장벽에 관한 쟁점은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과 철도 등 정부조달이며 일본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여부가 초점

□ EU에서 요구한 일본의 비관세장벽

- EU는 일본과 EPA협상에서 30개에 해당하는 일본의 비관세장벽* 개선과 철도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
 - * EU 개선 요구 : 자동차, 화학품, 전자기기, 식품안전, 가공식품, 의료기기, 의약품 등

① 일본의 공산품분야 비관세장벽

- 일·EU는 제2차 협상('13.6.24~7.3)에서 전자기기,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 안전기준 상호승인에 대해 합의
 - * 일본은 제1차 협상('13.4월)에서 EU가 제기한 번호판 조명, 백미러 형태, 운전석 경고표시 색깔과 형태, 스티어링 무게 등 자동차분야의 비관세장벽 12항목 중 8항목을 개선
- 수출 상대국에서 인증 절차를 폐지하여 일본국내에서 EU의 심사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, 대상품목은 日·EU 무역액의 50%에 해당
 - * 장기적으로 기준을 통일시켜 일본과 유럽의 공업제품의 안전규격 통합방안도 검토
- 자동차, 전자기기, 의료기기, 의약품(백신 제외), 화학제품 등 총 5분야에 대해 상호 승인협정을 도입기로 합의
- 일본은 EU가 제1차 협상('13.4월)에서 요구한 비관세장벽 30개 항목을 개선키로 하였으나, EU는 제8차 협상('14.12월)에서 일본에 비관세장벽 개선을 추가 요구
 - 자동차의 주간용 헤드라이트를 유럽 기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
 - * 일본은 헤드라이트 밝기 등 독자적인 기준이 있어 유럽 자동차의 대일 수출에 장애

- 일본이 주파수를 규제하고 있어 레이더를 사용한 충돌방지 등 안전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
- 일본국내에서 치즈에 사용되는 나타마이신(natamycin)을 소시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사용 확대를 요구, 와인의 원재료나 일본의 독자적인 맥주 정의에 따른 유럽산 맥주의 수입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
- 기타 의약부외품의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해 줄 것과 화장품 등의 원재료 규제 조화 등에 대해서도 요구
- 일본의 관심은 EU의 광공업품등의 高관세*를 철폐하여 일본제품의 경쟁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, 안전심사기준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EU의 관세 철폐를 요구
 - * 高관세 일본제품 : 자동차 10%(對EU 수출 22%), 전자기기 14%(對EU 수출 19%) 등
- EU는 한·EU FTA로 한국자동차의 수입이 급증*하였고, 유럽의 개인소비 악화로 자동차 판매가 침체되어 EU 자동차업체가 타격**을 받고 있으므로 일·EU EPA 협정에 일본차 수입에 관해 긴급수입제한 조항을 포함시킬 방침
 - * '13년 상반기 유럽시장의 자동차 점유율 : 일본차 12%, 한국차 6%
 - ** 폭스바겐(VolksWagen)은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고, 르노(Renault)는 노동자 7500명을 정리 해고, 푸조(Peugeot)는 공적지원을 요구
- EU는 일본의 경자동차 우대조치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다이하츠나 스스키를 공략하는 의도로 해석
 - 경자동차의 우대조치 내용은 ①세금은 소형차의 1/5, ②차량검사에 필요한 자동차 중량세는 1/3로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유럽 자동차기업들이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*을 늘리기 위한 수단
 - * 현재 일본의 신차판매 중 약 40%는 경자동차
 - 경자동차의 우대조치 철폐는 미·일 TPP 협의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, 대형차가 주력인 미국기업보다 소형차로 경쟁하는 유럽기업들이 더 강력하게 철폐를 요구
- 이에 대해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경자동차의 세제가 국제 수준보다 높지 않다는 점과 일본의 EU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0%인 점을 주장하면서 반발,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

② 일본의 정부조달 및 철도시장 개방

- EU 의회는 정부 부문의 물품 구입 등을 포함한 정부조달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EU와 동등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('14.1.15)
 - 동 법안에 따르면 EU 가맹국은 정부조달이 폐쇄적인 국가의 기업에게 500만 유로 이상의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
 -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 개방 정도는 EU가 85%인데 미국은 32%, 일본은 28%로 큰 차이
 - * 정부조달시장개방율 : 한국 65%, 캐나다 16%, 이스라엘 75%, 멕시코 75%, 중국·러시아·브라질·인도·터키 0%
- EU 의회의 법안 채택은 TPP를 통한 미·일 통상협상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
 - 일·EU EPA 협상('14.1월)에서 일본에게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려는 의도
- 정부조달부분은 일본의 철도시장에 대한 폐쇄성이 거론
 - 히타치제작소는 영국에서 철도사업을 수주하였으나, 유럽기업은 일본의 철도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시장진입의 폐쇄성을 지적하고, 철도시장의 개방을 요구
 - 일본은 JR동일본 등은 민간 기업이므로 정부조달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WTO에 요구하고 있으나, EU는 반발
- EU는 철도분야의 JR회사들이 자재조달에 관한 정보공개를 포함한 조달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
 - 철도분야의 기자재 조달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유럽의 철도관련 제품에 대한 배제 가능성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
 - * EU는 일본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함된 「안전조항」 규제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이유로 유럽 제품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, JR이 안전에 관한 물품은 경쟁 입찰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정을 과다하게 적용했다고 비판
 - ** JR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EU의 동의가 필요, 일본은 JR동일본, 서일본, 도카이 등 3사가 민영화되어 각국의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EU는 JR 3사가 여전히 공공기업이라면서 정부조달규정 적용을 주장

- 철도분야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철도관련 세계적 기업인 프랑스의 알스툼(Alstom)과 독일의 지멘스(Siemens) 등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*
 - * 알스툼 CEO는 “일본의 독자적 안전규격이 해외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”면서 일본의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
- ‘14.8월 EU는 일본 JR이 원자재 조달의 투명성 향상 등 철도시장 개방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면서, JR동일본 등 JR 3사를 WTO 정부조달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
- 철도시장 개방은 일본국내에서도 부처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
 - EPA 체결로 일본의 철도산업 수출을 강화하려는 경산성 및 외무성과 일본형 철도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국토교통성 및 JR 등 철도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
 - 만약 일본이 철도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EU와 EPA 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부분적으로 입찰 접근(access)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조정해 갈 것으로 예상

③ 일본이 EU에 요구한 비관세장벽

- 일본은 EU에 일본 술(사케)을 일본에서 생산된 형태로 유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병 규격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
 - 일본 술의 병 크기가 EU의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유럽 수출용 병을 따로 제조해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부담으로 작용
 - EU는 병 규격 변경은 EU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고, 일본 술의 수입이 증가*하면 유럽의 양주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발
 - * 현재 일본 술의 EU 수출량은 전체의 1% 미만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3.3.19, 4.6, 6.7/30, 11.15/21, 2014.1.7/15/16, 7.13, 10/16, 11.21)